

청년 활동가 생각하는 ESG 경영의 개념과 한계

- 풀씨연구회 공론장 참여 청년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

이태성, 권세은, 김치라, 강선균, 백운경, 신동욱, 손민영 [클라이밋플로팅]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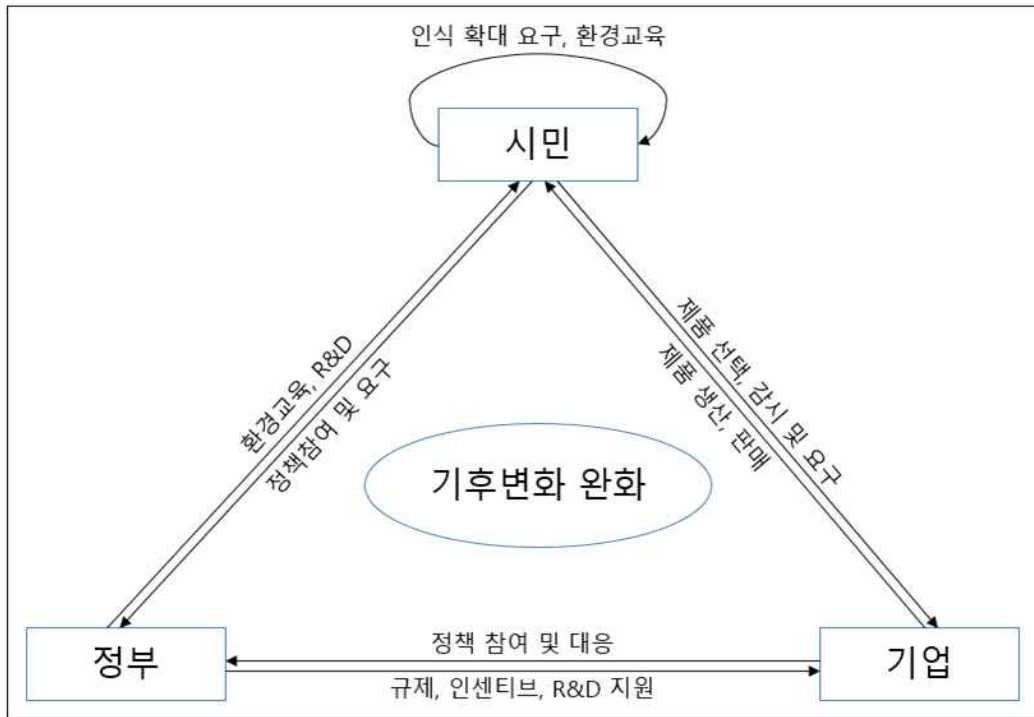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실존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온이 1년간 1°C 높아지면 농산물 가격은 2% 증가하고 NGFS의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까지 농산물가격이 약 0.6~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조병수와 민초희, 2024).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것이 가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다가온 변화에 따라 생활의 양식, 태도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근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예시라 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늦추는 등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 변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 목표로 하기도 한다.

두 가지 대응 모두 중요하나 기후변화가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IPCC는 그 임계점을 2°C 상승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지구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PCC, 2019). 그러나 2023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C 수준만큼 높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기에 기후변화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진단하고 그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찾는 자연과학 및 공학적 접근, 시민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환경 교육,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 등 다학제에서의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그 이후 각 연구가 자신의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예컨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밑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물은 다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재의 생산, 시민의 인식 개선, 정부의 역할, 관련 기술의 연구 이 네 가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재화 소비와 그 재화 소비의 생산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24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직접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산업 공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한국 총배출량의 18.5%를 차지한다(환경부, 2024). 에너지 역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와 화석연료 등 에너지 운반체를 소비재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데,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75.7%이다.

따라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재를 둘러싼 정부, 시민, 기업이 세 경제 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또는 인센티브 정책을 구성하거나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 환경 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친환경 제품 선택 확대 등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 정부, 기업, 다른 시민의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국제 사회 대응, 정부 정책 대응, 시민 요구사항 대응으로 탄소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과 연구 개발을 통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각 주체가 해야 하는 활동

각 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여러 층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재화의 생산차원의 논의는 ESG 경영과 생산 기술의 발전, 시민 인식과 전환에 관한 논의는 환경 교육과 소비자 행동, 정부 주도의 인센티브 또는 규제 방안은 환경정책 등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하다.

- ① 인간이 소비하는 다양한 재화의 생산자 논의 (ESG 경영 등)
- ②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인식전환 (환경 교육, 소비자 행동 등)
- ③ 정부주도의 인센티브 또는 규제 방안 (정부의 정책, 환경법 등)
- ④ 관련 과학기술의 R&D (탄소포집, 저장, 활용, 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세 주체의 역할을 돌아보고자 한다. 각 주체의 활동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완화 논의를 끌어나갈지가 중요한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국내 총 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철, 2023). 즉,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기업이 담당해야 하고 따라서 이 연구 모임에서는 기업에 사회·환경적 책임을 묻는 ESG 경영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활동가 청년들이 바라보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추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개념을 바라볼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숲과나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풀씨연구회”에 ‘클라이밋플로팅’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구성원은 공익변호사, 노동조합 활동가, 스타트업 CEO, 종교 협동조합 참여자, 대학원생으로, ESG 경영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고등학생, 사

회복지사, 경제 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논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참여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주제 별로 정리하였다.

3. 논의배경

1) ESG 경영의 쟁점화

ESG 경영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유행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는 TCFD 가이드라인, UN SDGS, IFRS ISSB 공시기준 등 여러 공시기준 및 평가체계가 난립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여러 평가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각의 평가체계는 모두 다른 관점에서 ESG의 경영을 다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Clement가 ESG 평가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성, CSR, 금융 재무적 관점, ESG 분석 관점, ESG 실행 평가 분석이라는 5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lement, 2023). 즉, ESG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은 평가를 주관하는 평가기관의 주관이 반영되어 서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관성이 부재한 ESG 평가 체계는 소비자 및 투자자가 정확한 ESG 리스크 판단 및 기업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ESG 평가에서 높은 평가만을 추구하는 기업 중 일부가 ESG 위상의 행태를 보이며, 이해관계자들의 ESG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클라이밋 플로팅’ 팀은 앞서 언급한 현실 아래 ‘ESG 경영’의 의미를 환경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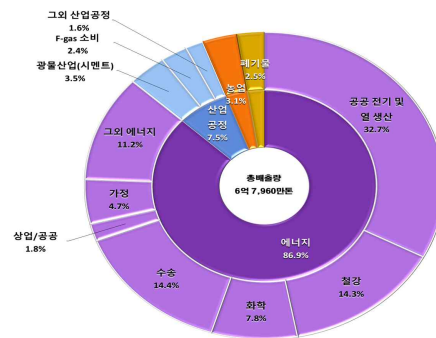
4. ESG 경영의 개념과 변천사

1) 기후위기 대응을 경영 방식 ESG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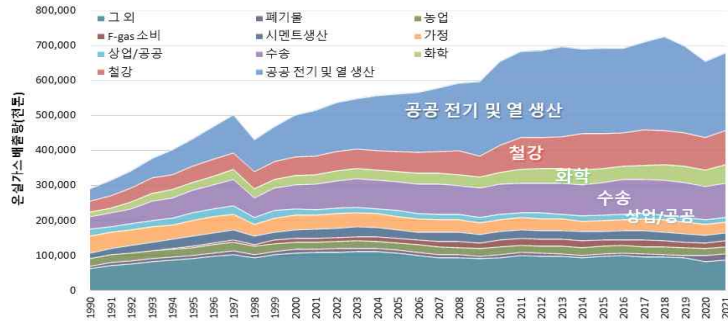
기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이 소비하는 다양한 재화의 생산차원의 논의 : ESG 경영
- ②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인식전환 (ex> 환경 교육, 소비자 행동)
- ③ 환경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 방안 (ex> 정부의 정책)
- ④ 관련 기술의 연구 (ex> 탄소포집, 저장, 활용, 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

이 중에서도 기업의 행동에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①이다.



[그림2]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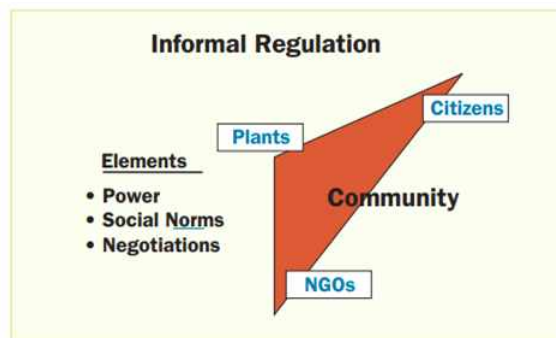


[그림3]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제공)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은 각종 재화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ESG 경영과 규제이다. 기업의 배출량을 국가가 규제로 다루려면 대부분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¹⁾. 이에 비해 소비자가 환경문제에 충분한 관심이 있다면, ESG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여 생산자-소비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제로 이 방식으로 단기간에 국내 기업의 환경개선 성과를 저비용으로 얻어낸 바 있다(World Bank, 2000).

- 인도네시아의 사례

해당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보자. 공식적인 규제당국이 존재하는 경우 정치적 절차를 통해, 없다면 비정부기구(NGO)나 공동체로서 기업에 사회적 규율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 기업이 공동체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 공식 규제와 유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그 권력 관계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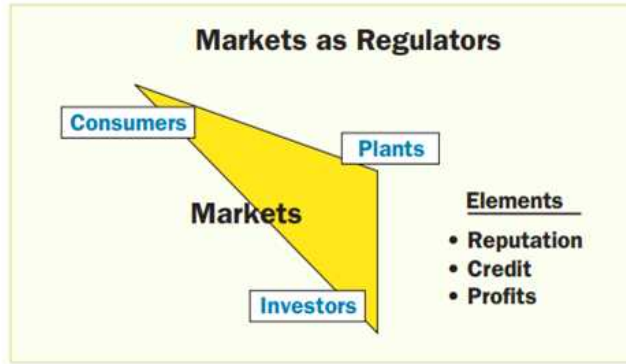


[그림4] 비공식 규제자로서 공동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환경오염을 억제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의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명성을 잃고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그림5). 국제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표준평가체계(ISO 14001)²⁾에 따른 결과가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1) 관련 논의는 배출권거래제, 피구세와 같이 환경경제학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여기서는 ESG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논의의 세부 사항은 생략한다.

2) ISO 14001은 ESG 경영 평가 도입 이전에 사용된 국제 표준공시 기준이다.



[그림5] 시장의 역할

인도네시아 환경 규제 당국은 PROPER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시행했고, 그로 인한 변화는 아래 [표2]에 나타나 있다.

[표2] PROPER 평가의 효과

	June 1995	December 1996	Change	% Change
Gold	0	0	0	0
Green	5	5	0	0
Blue	61	94	33	+54
Red	115	87	-28	-24
Black	6	1	-5	-83

- ESG 경영의 개념

2000년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등장 이전부터 이미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시 ESG 경영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ESG 경영의 정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새로운 투자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KDI,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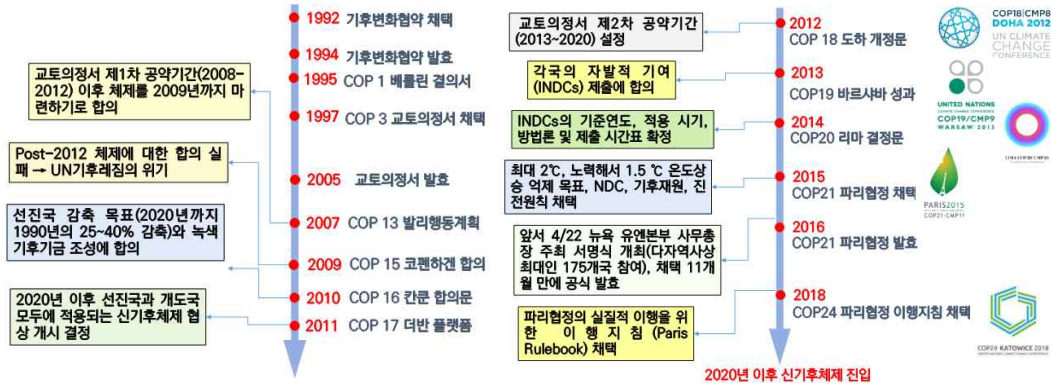
E, S, G 각각의 영역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져 온 분야이므로 각각을 구분하여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Environment)

1992년 5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이후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97년 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이 대부분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추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기후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COP21에서 지구온난화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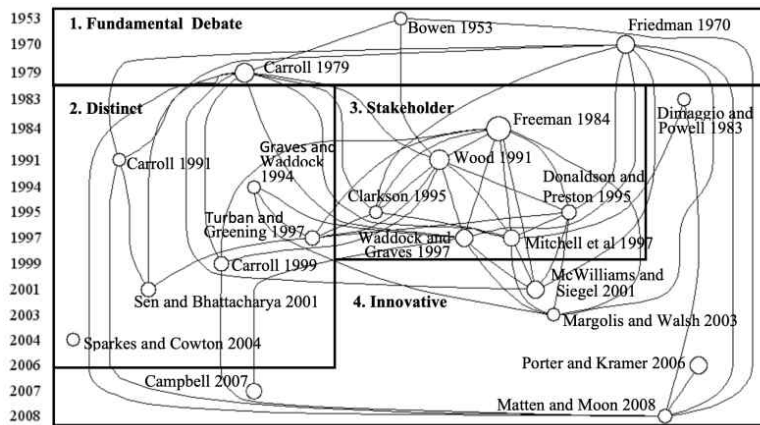
변화 대응,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다. UN은 2016년 SDGs(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같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포괄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어떠한 직접적 제재 수단이나 구속력이 부재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6] 환경 관련 주요 논의 흐름(윤순진 교수 강의자료)

② 사회적 책임(Society)

사회적 책임 영역은 CSR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부터 논의가 이어져왔다. 대표적으로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마이클포터의 비판이다. 그는 기업의 CSR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개념인 CSV를 제안하였다. CSV는 기업입장에서 사회적 가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조금더 폭넓게 다룬 논의이다(Michael Porter et al, 2006). 어떤 논의가 이어져 왔는지, 그 흐름은 [그림6]에 나타나 있다.



[그림7] CSR 개념의 연구 계보(Daugaard, 2022)

③ 지배구조(Governance)

OECD에 따르면 기업의 거버넌스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한국은행,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거버넌스 구조는 전통적으로 행정학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로, ESG 경영에서는 이를 기업 현실에 맞추어 변용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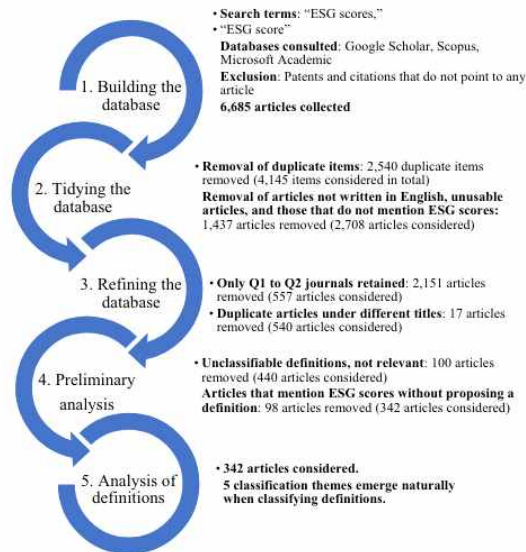
ESG 경영이 성공하려면 본질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소비자 또는 투자자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달할지 방법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시기준과 그 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한국에

서는 ESG라는 개념이 유행하면서, KSI, 한국경제와 같은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평가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 결과 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이는 개별 주체의 정보에 대한 피로도 높은 신뢰도를 낮춰, 본래 평가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문제의식 : ESG 경영 평가의 비일관성

ESG 경영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유행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는 TCFD 가이드라인, UN SDGS, IFRS ISSB 공시기준 등 여러 공시기준 및 평가체계가 난립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여러 평가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각의 평가체계는 모두 다른 관점에서 ESG의 경영을 다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Clement의 연구에는 해당 문제가 잘 드러난다. 그는 2023년 그동안 이루어져 온 ESG 경영 평가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에서 분석 대상 논문 342건을 선정한 방법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8] ESG 평가 분석 논문 선정 방법

분석대상 논문의 품질 선정을 위해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상위 50% 이내의 논문만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3] ESG 평가와 관련된 논문 메타분석 결과

지속가능성(50)	지속가능성으로서의 ESG(21)
	지속가능성의 표현 방식(29)
CSR(95)	CSR로서의 ESG (26)
	CSR의 표현 방식(69)
공시체계(35)	ESG 성과공시(6)
	ESG 성과공시 지표(29)
금융(153)	ESG로서의 ESG (139)
	위험분석으로서의 ESG (14)
ESG 분석(9)	ESG 평가의 분석(9)

이처럼 가 ESG 평가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성, CSR, 금융 재무적 관점, ESG 분석 관점, ESG 실행 평가 분석이라는 5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서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자.

① 지속가능성

총 50편의 논문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ESG를 분석했다. 이 중 21편은 지속가능성과 ESG를 동의어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했다.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환경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ESG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검토한 논문에서 드러난 지속가능성은 외부성 하에서 회사가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Rekker et al., 2021).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평가 주관기관이 입맛대로 활용하여, 개념에 혼동을 줄 수 있다.

②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총 95편의 논문이 ESG의 개념을 CSR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중 26편은 회사의 CSR 정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69편은 ESG 평가에 CSR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로 논의 되었다. ESG 평가는 CSR의 연장선 상에 나타난 개념이기는 하나, CSR은 정성적 영역도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공시체계

총 35편의 논문에서 ESG 평가를 공시체계로 다루었다. ESG 평가결과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그것으로 회사의 투명성 정도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업은 최대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므로, 평가의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④ 금융

153개의 연구에서 ESG 평가는 금융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투자자가 기업을 가치를 평가 하는데 ESG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중 97개는 다른 재무 변수와의 관계, 14개는 미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한 분석, 11개는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서의 ESG를 다루었다.

⑤ ESG 분석

나머지 9편에서는 ESG 점수에 대해 특정 관점을 취하지 않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표4] ESG 평가 기관별 점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1) 서스틴베스트	1							
(2) KCGS	0.699	1						
(3) 레피니티브	0.523	0.542	1					
(4) 무디스(전체)	0.327	0.376	0.753	1				
(5) 무디(실제)	0.422	0.595	0.800	1	1			
(6) 블룸버그	0.538	0.641	0.638	0.547	0.630	1		
(7) CDP	0.401	0.474	0.591	0.594	0.654	0.504	1	
(8) 서스테이널리틱스	0.031	0.097	0.365	0.275	0.355	0.205	0.264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이 이 비밀관성이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 결과, 총 8개 평가사³⁾가 진행한 국내 기업의 ESG 평가 상관계수는 평균 0.48이었다. 이는 국내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오리건대와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세계 3대 평가기관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 톰슨로이터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시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기관간 불일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다(Dane Christense et al, 2022).

그 원인으로서는 ESG 평가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합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일관성이 부재한 ESG 평가 체계는 소비자 및 투자자가 정확한 **ESG 리스크 판단 및 기업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ESG 평가에서 높은 평가만을 추구하는 기업 중 일부가 **ESG 위성의 행태**를 보이며, **이해관계자들의 ESG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5. ESG 경영의 국제제도와 입법 동향

ESG 공시의무를 담은 EU의 CSRD부터 CBAM, 미국의 IRA법 등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법과 제도 형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본 및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미국과 유럽의 관련 규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ESG기본법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아직 ESG 평가기관 신뢰성이 아직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을 시작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ESG 관련 법과 제도를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하여 검토해보고 추세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 및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EU

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일종의 무역관세로서 탄소 배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로, 국가간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여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EU뿐만 아니라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EU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서 철강⁵⁾과 탄소배출량이 높은 알루미늄⁶⁾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수출기업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EU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2023년 10월부터 6가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에 대해 시범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범위에는 외부에서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인 간접 배출도 포함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EU 수출 상위 중소기업⁶⁾에 컨설팅, 탄소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 인증 획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계산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탄소저감용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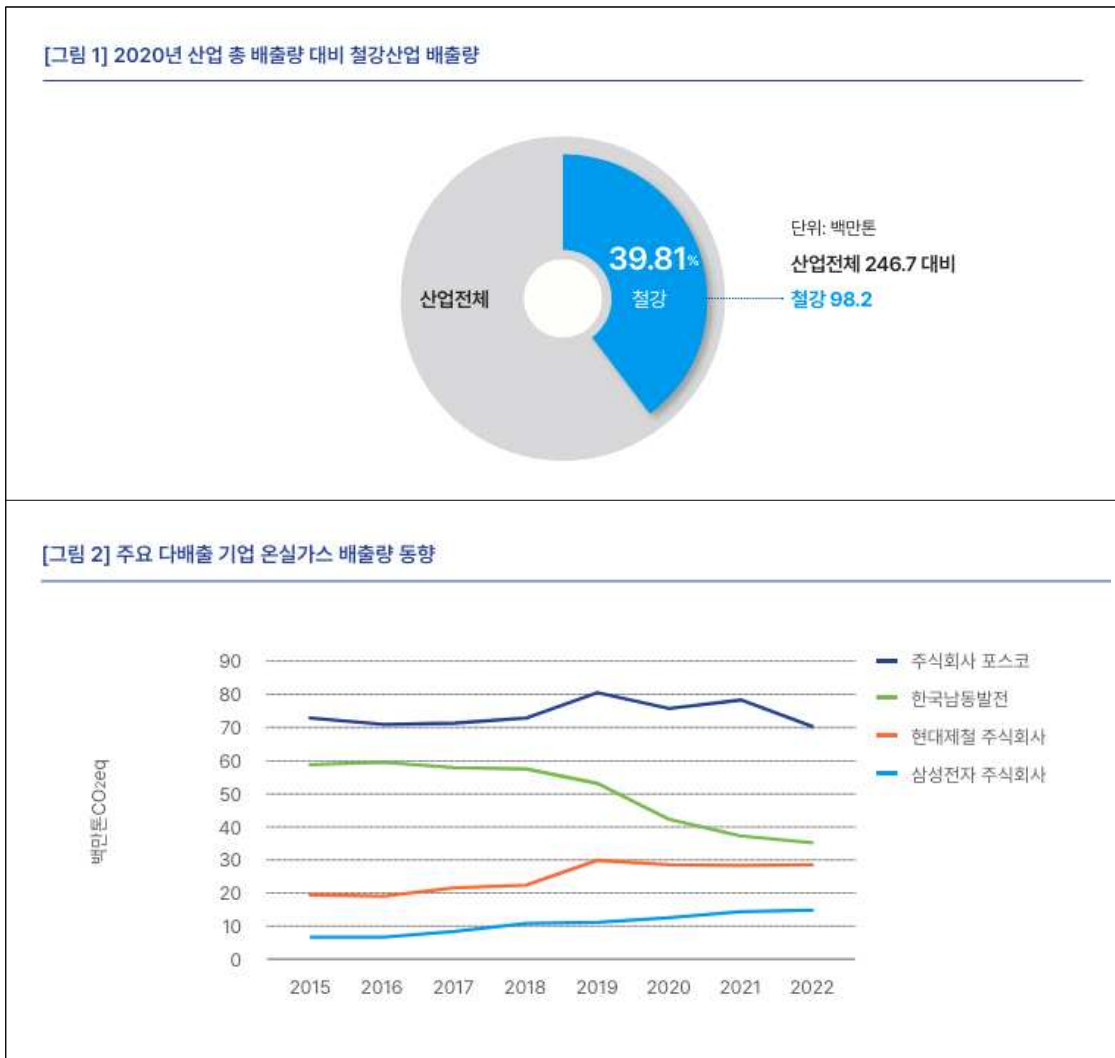
3) 서스틴베스트, KCGS, 무디스, 레피니티브, CDP, 서스테이널리틱스, 블룸버그

4)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규제 차이로 인한 제품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

5) CBAM 품목 EU 수출량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해당

6)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 수출 국내 중소기업은 1,358개

도록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개편되지 않고 철강업체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2040년에는 EU에 연간 1,910 억원의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⁷⁾.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법 제1조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⁸⁾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도 전환 부문을 제외한 주요 다배출 기업들은 유의미한 온실 가스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8,000원대로 급락하였으며⁹⁾, 저 탄소 기술에 투자해 배출량을 줄여 잉여배출권을 판매하는 것보다 증가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상황이다.



[그림9]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동향(기후솔루션, 2024)

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유

- 7) 기후솔루션 보고서 '무상배출을 중단하라: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2024.6.13.): 탄소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탄소저감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 CBAM으로 인한 부담금을 최대 7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8)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해 다 배출업체의 배출감축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 9) EU ETS 배출권 가격 톤당 약 10만원(70유로)

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의 CSRD(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는 EU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제도로서 기존 ESG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23년 1월 발표하여 2024년 1월 본격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한 EU ESG 공시기준이 2025년부터 본격 의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SRD는 EU 27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상 법률로, 2023년 7월 EU집행위원회(EC)가 CSRD의 이행을 위한 위임법(Delegated Act)을 발표하고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¹⁰⁾를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안이 확정됐다. 2024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됐다.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해당 기업¹¹⁾들은 ESRS 표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CSRD에 직접적인 제재 내용은 없지만,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계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SRD의 목표는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의 준수로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의 발전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CSRD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CSRD 미준수 시 연간 매출액 최대 5%의 벌금과 민사 책임, 유럽 내 공공조달 금지 등이 따를 수 있다.

관할권	기준제정기구	기준제정경과	다음 단계	적용대상	보고연도	공시주제	스코프 3	인증 요구
	EFRAG	ESRS 채택 '23.7월	SME 기준 '24년 산업별 기준 '26년 비EU 기준 '26년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기업	'25년 FY24	All	요구 750만 이하 적용 제외	제한적 인증 3년 이내 합리적 인증 고려
	SEC	최종안 승인 '24.3.6일	미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표 예정	모든 공개기업	'26년 FYB25	기후	요구하지 않음	요구 '28년부터
	SSBJ	ED 의견수렴 중 '24.3월~7월	최종 기준 발표 '25.3월 예정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주요 상장기업	'27년 FYB26 or '28년 FYB27	All	요구 적용 제외 면제	제한적 인증 일부 기업은 4년 후 합리적 인증
	CSSB	ED 의견수렴 중 '24.3월~6월	최종 기준 발표 '24.4분기 예정	증권 발행자	자발적 '26년 FY25	All	요구 적용 두 해 면제	
	AASB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24.6월 예정	기업법 제2M장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	'26년 FYB25	기후	요구 적용 제외 면제	제한적 인증 '30년까지 합리적 인증 고려
	DBT	IFRS S1 및 S2 승인 의견수렴 완료	UK SDS 발표 '24.7월 예정	(상장기업 또는 등록법인에 적용 가능)	'26년 FY25			

GRI 표준, ISSB 표준, ESRS, SEC 기후 공시 규칙 비교 ①				
	GRI 표준	ISSB 표준	ESRS	SEC 기후 공시 규칙
표준명	GRI 스탠다드 GRI Standards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SEC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적용 대상	자발적 적용	국가별 상이	EU 및 EU 내 활동 비EU 국가 의무 적용	미국 상장 기업 의무 적용
관할 지역	전세계	전세계/ 국가별 승인	유럽 연합	미국
상위 기관 (개발 기구)	GSSB	IFRS 재단, ISSB	EU 집행위원회, EFRA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근거 법률	-	-	CSRD	Regulation S-K, Regulation S-X
최종안 발표 시기	2021년 10월 5일	2023년 6월 26일	2023년 7월 31일	2023년 내
발효 시기 (회계 연도)	2023년 1월 ~	2024년 1월 (국가별 결정)	2024년 1월 ~	최종안 발표 시기에 따라 결정

[그림10] 국제 기후공시지침(데일리임팩트, 2024)

EU의 ESRS 외의 ESG 공시 기준은 미국 기후공시안(SEC)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10) CSRD의 이행도구로서 CSRD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서술된 공시기준
 11) (1)총 자산 규모 2천만 유로, (2)총 매출 4천만 유로, (3)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최소 2가지 이상 해당 되는 기업이 공시의무 부과 대상

(ISSB), GRI의 기준이 있으며 기업 경영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를 경영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과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경영 체계의 강화, 인권의 중요성이 공통된다. ISSB기준과 SEC기후공시안은 이상 기후 등 외부의 상황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반면 GRI기준과 ESRS는 투자자는 물론 소비자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끼친 피해의 해결 노력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급망실사법, 공급망 실사지침)

2024년 5월 유럽의회는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를 최종 승인했다. CSDDD는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¹²⁾ 의무 부과와 피해자의 구제 권한 강화가 골자이다.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¹³⁾은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역외 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7~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의 최소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약을 탈퇴하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2022년 8월 시행하였다. 이 법안은 폭등한 인플레이션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한다. IRA의 규모는 7400억달러(약 960조원)으로 그 중 3740억 달러(약 485조원)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자국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구매 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제품에만 인센티브 신청 자격을 주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조건을 충족한 배터리를 사용해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최소 50% 이상을 생산하고 조립해야 하며 2029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다. 달리 말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니켈 리튬 등은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배터리업체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격탄을 맞았고, 얼마 전 현대차와 기아는 IRA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세계 2위 리튬기업(SQM)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대외 의존을 65% 미만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¹⁴⁾를 2024년 5월 발효했다. EU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실상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는 취지다. 미국 IRA 대응 목적의 탄소중립산업법(NZIA:Net-Zero Industry Act)도 2024년 5월 유럽의회를 최종 통과하였다.

12) 공급망 실사란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법한 인권·환경·노동·안전 등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말함

13) EU 역내에서만 해도 적용 대상 기업이 5400여 개로 추정

14) 자동차 배터리 원료채취·제품생산 등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 탄소 배출량 표기 의무화


- 보조금 관련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규정임

구분	적용 대상	내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30D)	친환경차 (전기차 등)	* 비중: 배터리 핵심광물(50%) + 배터리 부품(50%) * 조건: 전기차 최종 생산 북미내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Sec.45X)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단, 핵심소재는 제외)	* 시기: 2023년~2032년까지 적용 * 조건: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Capex(시설투자) 지원금 (Sec. 48C)	핵심광물(미 지질조사국) + 핵심소재(미 에너지부)	* 조건: ①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제품 제조 시설, ②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시설일 것

주) AMPC와 QAEPC는 중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림 11] 미국 IRA 보조금 관련 핵심규정(삼일회계법인, 2023)

	입법 현황	한국 기업 영향
1.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의회 통과	매우 높음
2. 소비자 수리권 보장 지침	의회 통과	매우 높음
3.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의회 통과	매우 높음
4. 포장·포장재 규제안(PPWR)	의회 통과	보통
5. 넷제로산업법(NZIA)	의회 통과	낮음



*자료: 유럽의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greenium

[그림 12] 유럽 기후 입법동향(윤원섭, 2024)

4) 그 밖의 나라들

호주는 2024년 1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공시기준을 확정하여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국은 2026년부터 공시 목표 2024년 말까지 공시 의무화 규정을 확정하고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내년 1분기 내 확정할 것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2023년 4월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여 내년 3월까지 공시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에게 공시 의무화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24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¹⁵⁾. ISSB의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제적 표준으로 볼 수

15) KSSB의 공시 기준은 다른 국가의 공시 기준과 같이 전 세계 146개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을 만든 국제회계 기준(IFRS)재단의 산하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있는데 KSSB는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내 상황을 반영해 일부 항목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초안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 회계기준원은 공개 초안을 바탕으로 4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하반기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 소결

ESRS를 비롯한 ESG 공시 기준, CBAM, IRA 등의 ESG 관련 법과 제도는 모두 글로벌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직 관련 법이 미비하다 해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으로서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발맞춰 국내의 ESG 자문 수요가 커지면서 로펌·회계업계에서는 ESG진단 및 컨설팅이 하나의 분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우리나라 산업의 역량 제고 및 대응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국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거래제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ESG 관련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 법제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통해 입법을 통한 ESG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제도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는 실정이지만 지구가 마주한 기후위기와 그에 기업이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를 통해서라도 ESG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필수불가결하며 기업이 현시대에 맞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6. ESG 경영의 위기 : 그린워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기업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영 방식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으며 급부상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ESG 경영이 시험대에 오르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SG 경영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그린워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1) ESG 경영에 대한 회의론

ESG 경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에 반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Anti-ESG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ESG가 기업의 본래 목적을 손상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 대기업 내부에서 ESG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ESG 경영의 실제 효과성과 그로 인한 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그동안 해왔던 사회공헌 사업을 ESG경영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SG경영의 실패 사례들은 ESG가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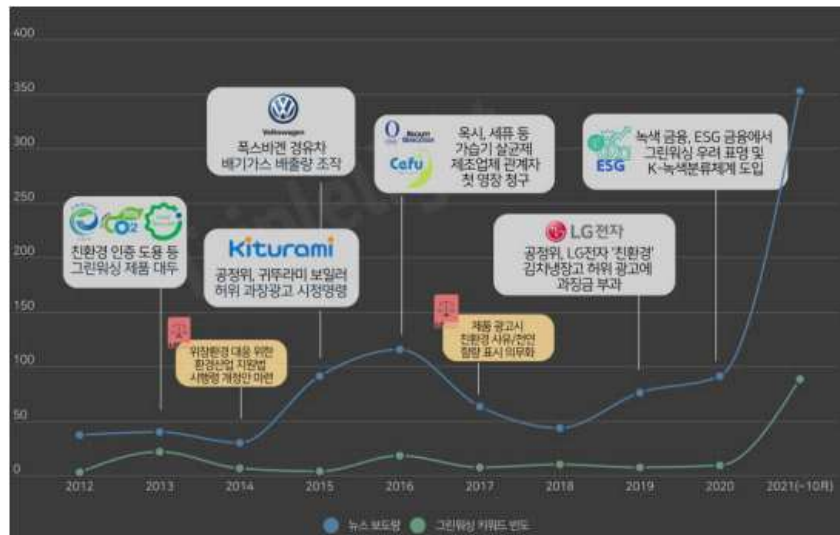
[그림13] 연세대학교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의 문구

2) 그린워싱 (Greenwashing)1) 사례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마치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ESG 경영의 본질을 훼손하며,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오도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ESG 경영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진정한 환경 보호 노력을 방해한다.

① 뉴스 데이터로 본 그린워싱

'그린워싱'을 키워드로 넣어서 정권별로 관련 뉴스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제18대, 19대, 20대 정부에서는 각각 다른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18대 정부(2012~2016년) 시기는 기업의 친환경 허위 및 과장 광고 사례와 관련된 보도가, 19대 정부 (2017~2021)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슈가 발견되고 있다. 현 정부인 20대 정부(2022~현재)에서는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공정위, 그리고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를 한 배우 류준열과 연결되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한 실망이 환경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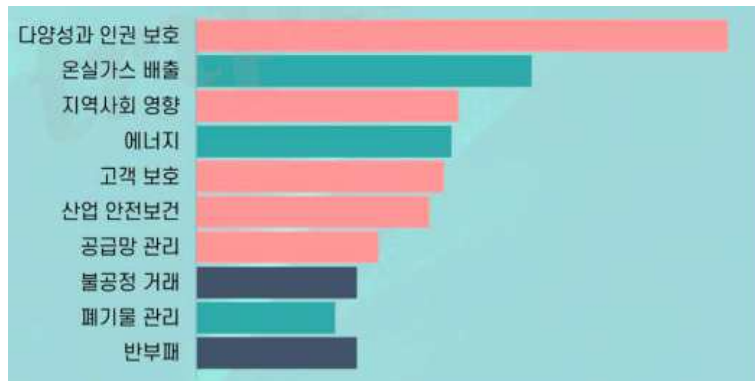
[그림14] 그린워싱 관련 뉴스 보도 및 주요 사건

구체적인 예시로 2015~2016년에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옥시, 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량이 증가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문제인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과 ESG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을 우려하는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량이 증가했다.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친환경 마케팅이 그

린위싱으로 지적되어 집중보도되었으며, 이에 '그린위싱'을 주제로 한 기고, 논평, 탐사 보도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② 국내 Top 30대 기업¹⁶⁾이 주목한 ESG 중대 이슈

임팩트 측정 컨설팅 회사 트리플라잇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중에서도 특히 사회(S) 이슈 (62.5%)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인권보호' 관련 ESG 세부 이슈들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 보호에도 관심이 높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문제해결을 중대 이슈로 선정한 기업들도 많았다.



[그림15] 국내 상위 30 개 기업이 주목한 ESG 중대 이슈 Top 10 (IM. Lab, 2021)

게다가 국내 상위 30 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ESG 관련 부정적 영향을 공개하는 수준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환경) 관련 부정적 이슈 공개 비중이 14.9%로 가장 높았고, ESG 중대 이슈의 대부분을 차지한 S(사회) 영역은 6.4%로 가장 낮았다.



[그림16] 국내 상위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관련 부정 영향 공개 수준(IM. Lab, 2021)

국내 상위 30대 기업은 E(환경) 영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19.1%) 관련 부정적 이슈를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폐기물 관리(15%)와 에너지 소비(11.4%)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16) 국내 산업군별 상위 30대 기업(조사대상) : SK이노베이션, S-Oil, GS 칼텍스, LG화학, POSCO,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LG 생활건강, KT&G, CJ제일제당, 한미약품, KB지주,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2020년 기준) 등 총 30곳의 최근 2개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중대성 이슈를 ESG 카테고리로 구분 및 통합하여 도출

별로는 필수 소비재·건강관리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개선 과정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본문에 자발적으로 기술 및 공개하는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금융 및 정보기술 기업이 뒤를 이었다.

③ 그린워싱의 해외 사례

전세계적 ESG 열풍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에코’, ‘친환경’, ‘100% 재활용’ 등 용어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내고, 그린워싱 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그린워시닷컴(Greenwash.com)이 있는데, 이곳은 유명 브랜드의 이름만 클릭하면 제품별 그린워싱 현황과 이유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ㄱ. 그린워싱으로 못매 맞은 ‘탄소중립 월드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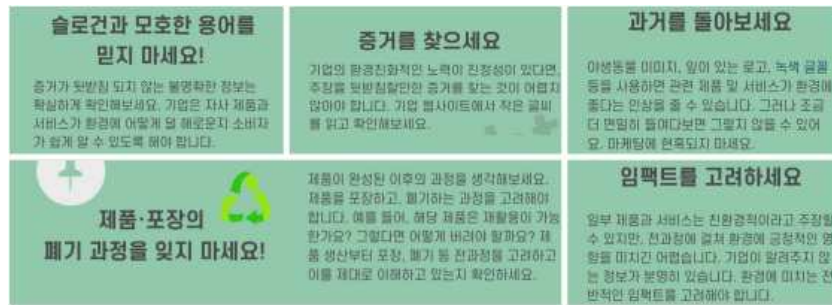
‘탄소중립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공식 선언한 내용이었다. 2022년 11~12월 진행된 FIFA 월드컵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대 규모인 카타르에서 개최되었다. 조직위는 “온실가스 포집 프로젝트에 투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기후운동가들은 조직위의 홍보가 “그린워싱”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탄소시장감시(CMW)’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외에 경기장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조직위가 추산한 양보다 8 배 많은 140만톤에 달한다. 조직위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들이 수도인 도하로부터 50k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머무는 숙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일일 168회 비행기편이 제공되고 있었다.

ㄴ. 영국의 그린워싱 광고와의 전쟁 선포

2020년 유명 브랜드의 그린워싱 현황을 조사한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하 CMA)은 조사 대상 기업의 광고 중 약 40%가 거짓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CMA는 영국에서 50년 이상 광고 표준을 관리해 온 광고표준협의회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이하 ASA)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린워싱 광고를 감시하며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ASA에는 소비자로부터 연간 3 만건 이상의 그린워싱 관련 고발이 접수되고 있다.

ASA 는 매주 수요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 광고 리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ASA의 고발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철회 과정 전반의 기록을 공개 중이다. 일례로 유럽 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 항공사”라고 광고했으나, ASA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광고를 금지시킨 바 있다. 아몬드·귀리 우유로 유명한 ‘오틀리 (Oatly)’ 역시 “우유에 비해 73%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광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받았다. CMA는 그린워싱을 판별할 수 있는 5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함 ‘슬로건이나 모호한 용어는 믿지 않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찾기’, ‘포장과 제품의 폐기 방법을 생각해보기’, ‘과거를 돌아보기’, ‘영향을 고려하기’ 등이 그것이다.

[표5] 소비자를 위한 영국의 그린워싱 판별 가이드(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1)



ㄷ. 독일 도이치뱅크의 압수수색 사례 등 금융에서의 그린워싱 경계령

2021년 6 월 독일 검찰은 거대 자산운용사 DWS와 대주주인 도이치뱅크 본사는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일반 펀드를 ESG 펀드로 과장하여 투자자를 오도한 것에 책임을 묻은 것이다. 최고 경영자인 아소카 뵈르만(Asoka Böhrmann) 은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사임을 했다. 이처럼 유럽 차원에서 금융 시장 전반의 그린워싱을 경계하고 있다. 2022년 초, 유럽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은 " 투자자들에게 금융 상품의 친환경성을 과장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Sustainable, ESG, Green등의 용어를 펀드 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④ 친환경 위장 제품의 국내사례

국내 역시 ESG 워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광고법에 위반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의 부당표시광고 관련 자료 (2015~2021 년)를 보면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한 기업 과징금 사례의 87.97%가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 광고' 로 5년간 381억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새천매트는 무환경호르몬 매트 거짓 광고로 6,400 만원 과징금을 이마트는 가슴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부당 표시 광고로 8,300 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표6]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기업 현황

날짜(조치일)	기업명	과징금(백만원)	재제 내용
2017-01-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8214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 광고
2017-02-23	새천매트	1073	무환경호르몬 매트 거짓 광고
2018-03-19	이마트	710	가슴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 광고
2019-05-23	한국닛산	500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2019-06-17	엘자전자	488	친환경 김치통 광고 거짓·과장 광고
2020-12-29	케이씨씨	451	창호 제품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 광고
2021-01-07	이건창호	406	창호 제품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 광고
2021-04-20	엘자하우스	390	창호 제품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 광고
2021-04-20	현대엘앤씨	277	창호 제품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 광고
2021-10-25	스텔란티스코리아	231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 광고
2021-10-27	한국닛산	228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 광고
2021-11-0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17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 광고

3) 소결

그린워싱, 임팩트워싱, ESG워싱 등 이해관계자를 호도하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혹은 'ESG' 라는 단어를 앞세워 자신들의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부정적인 임팩트는 감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트리플라잇이 산업군별

상위 30 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 데이터에 비해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본문에 언급하는 비중은 겨우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과 실제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 'ESG 경영'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ESG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ESG를 단순히 CSR과 같은 사회공헌사업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ESG 목표를 기업들의 실제 경영 전략과 통합하고, 투명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도 내야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정부와 규제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ESG 경영의 개념과 한계가 무엇인지 문헌과 활동가 청년의 토의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앞서 검토하였듯 ESG 경영이라는 개념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가 상호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발전해 왔으며, 세 개념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정립된 개념이다. 특히, 국제적 환경 담론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셋 중에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활동가 청년의 관점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문제는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 정보가 그 정보를 활용하는 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공시기준'을 만드는 등 관련 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그러한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공개된 정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이 ESG 경영을 지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업, 시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ESG 경영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한계 및 제언

이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구 과정에는 스타트업에서 어떤 식으로 ESG 경영을 운영하고 있는지, 종교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유관 법적 소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우리 연구모임은 연구를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후 연구모임에서는 우리가 진단한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각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구체적 제언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ESG 워싱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ESG 공시기준 도입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 또, 한국형 녹색산업 분류 체계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녹색 산업 육성도 더디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워시닷컴과 같이 ESG 워싱 사례를 분석하고 알리는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피로도를 낮추고 기업의 대응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후솔루션, 2024, 『무상배출을 중단하라: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 <https://forourclimate.org/ko/research/272>

대외정책연구원, 2022,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조병수, 민초희, 2024,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4-18호

환경부, 2024,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 온실가스종합센터,

IM. Lab, 2021, 『ESG WASHING Analysis 1. GREEN WASHING』

IPCC, 2019,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KDI, 202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 경영, <https://iei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74>

Alexandre Clement, Elisabeth Robinot, Leo Trespeuch, 2023, The use of ESG scores in academic literatur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https://doi.org/10.1108/JEc-10-2022-0147>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1, 『[Guidance] Green Claims code for Shopp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claims-code-for-shoppers>

Dane Christensen, George Serfeim, Anywhere Sikochi, 2000, Why is Corporate Virtu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Case of ESG Ratings, *The Accounting Review*.

Daugaard, D.; Ding, 2022, A.Global Drivers for ESG Performance:The Body of Knowledge.Sustainability 2022,14, 2322. <https://doi.org/10.3390/su14042322>

Michael Porter et al,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World Bank, 2000, 『Greening Industry: New Roles for Communities, Markets, and Governments』

기사

[온실가스 100만톤클럽②] 상위 10곳이 국가전체의 46%, 뉴스펍킨, 2023.2.1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6>

"EU CBAM 본격 시행되면 '40년 철강업계 부담금 1910억원", ESG경제, 2024.6.14,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1>

규제에 한숨만...韓, CBAM 경계령 발동, 매일일보, 2024.6.13,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677>

변화의 최전선에서 '규제'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한국경제, 2024.6.19,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6197098r&category=>

지속가능한 공급망 만들겠다는 EU, 국민일보, 2024.5.3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963376>

[ESG보고서와 검증④] 지속가능성 4대(GRI, ISSB, ESRS, SEC) 표준의 특징, 데일리인팩트, 2023.8.31, <https://news.dealsit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34>

현대차·기아, 세계 2위 리튬기업과 공급계약...美 IRA 대응, 데일리한국, 2024.6.18,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809>